

## 원희룡 장관 “공직 부정부패 카르텔 국민을 위해 발본색원 할 것”

- 원 장관 휴가 중단, 지방국토관리청장 긴급회의 소집 -
- 강도 높은 전수조사 실시 및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신고·제보시스템 활성화 지시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가를 중단하고 27일 진영국토관리사무소(경남 김해시)를 방문하여 부정부패 카르텔 청산 대책 관련 5개 국토관리청장 긴급회의를 개최하였다.
  - 이번 긴급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은 최근 소속 직원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을 보고 받고 “공직의 부패행위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 발본색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  -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최근 소속 과장이 공사업체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'22. 7. 15. 창원지검에 구속송치 되었다.
- 원 장관은 “공공기관 혁신에 앞서 우리부터 부패와 기득권 카르텔을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하고, 강도 높은 전수조사와 신고시스템을 재정립”할 것을 지시했다.
- 특히 “공직자가 업체와 유착하거나 퇴직자와의 연결을 통한 카르텔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, 국토부와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, 부도덕한 행위의 신고·제보시스템 활성화”를 지시했다.
  - “향후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기관장의 관리 책임도 함께 물어 공직자의 근무 기강을 확립할 것”을 지시했다.

- 또한 "LH 투기사태 이후 진행된 감사원 결과 발표(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와 농지법 위반)에 연루된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 일 할 자격이 없다"며 "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하며, 국토부와 LH는 감사에 준하는 수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라"고 강조했다.

2022. 7. 26.

국토교통부 대변인